

헌재로 공넘긴 첫 '법관 탄핵'...9명중 6명 찬성맨 파면

국회, 찬성 179표로 임성근 탄핵 의결

소추의결서 제출되면 사건 배당될 듯

변론도 진행...인용·기각·각하 중 결정

다음달부터 전직공무원...전례 없는 심판

사상 처음으로 헌재 법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됨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여러 변수들이 거론된다.

심판 기간이 길어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탄핵

사유와 같은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헌재를 찾아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

결했다.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돼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중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사건은 헌법소원과 달리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 단계가 없다.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건이 배당되면 헌재는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의견서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변론기일에는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장이 직접 임 부

장판사 측을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이후 내용을 검토해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변수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월28

일까지로 다음달 1일부터는 헌재 법관의 신분이 아니다. 즉 오는 3월부터는 헌재가 아닌 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2개월여, 박 전 대통령은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임 부장판사의 신분이 전직공무원으로 전환돼도 헌재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법은 없다. 전직공무원의 탄핵심판사건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헌재가 다양한 법리와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여지도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

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다스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심판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 셈이다.

기동취재본부

신축 아파트 가림막 활용한 이색 '소방 홍보물' 시선 집중

영광소방서 '가림막 활용' 소화기 배치 홍보 효과 극대화



신축 아파트 외벽 가림막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이색 '소방 홍보

물'이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4일 전남 영광군·읍의 한 신축 아파

트 공사현장에 '우리집 화재예방 백신은 소화기'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외벽 가림막이 등장했다.

이 가림막은 '화재는 바이러스처럼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퍼집니다. 가정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문구를 통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광소방서는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가림막의 경우 아파트 골조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면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착안해 소방시책 홍보 그림과 문구를 삽입한 이색 홍보 방안을 고안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영광 주민은 물론 영광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많은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광=서희권 기자



길게 늘어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줄

451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4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사의...3년 연속 공석 현실화하나

2018년 이후 2년 만에 구성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장 사퇴 의사로 또다시 공석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남대 총학생회장 임기안(통계학과·3학년)씨는 "오는 17일 직책을 그만두고 물러나겠다"고 4일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간부들의 '경품 추첨 조작 논란'과 '신천지 포교 활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말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총학 선거 직후 '투표 격려성 경품 추첨 행사'를 열었다.

당시 학생회 간부가 추첨 프로그램을 설계·제작했는데, 추첨 생중계 방송 중 특정 코드 삭제·입력과 낮은 화질로 조작 논란이 일었다.

전남대가 통계·전산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유나 기자

광주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업소 61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광주에서만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시설 등 1192개소에

대해 경찰,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광주에서 61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해 44건은 고발하고, 13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집합금지 위반업소 신고 접수자 지속

돼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 불안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